

# 사찰-지역연합체-종단 잇는 시스템 구축 시급

오는 2월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각 시·군·구에 설치돼 있거나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안전보장 체계를 갖추고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자원봉사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해 활동 폭과 질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불교계의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얼핏 생각하면 불교계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불교의 위상,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 2월 시행 자원봉사활동법으로 본 불교계 과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와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활동 중심체로서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보험가입 등) 등을 체계화해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개입,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개입 형태의 자원봉사시스템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은 1973년 정부 차원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읍면동 단위까지 3천여 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약 7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돼 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핵심과 의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핵심은 각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복지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시민중심의 사회활동이 보다 활발

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각 정보가 몰려들게 된다는 점이다.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시설 봉사 외에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가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일례로 모 지역의 경우 2004년 자원봉사센터 예산 가운데 2~3억원이 20여 자원봉사팀의 활동비로 지원됐는데, 이 20여 팀 대부분이 개신교의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와 교회 노인무로급식팀이었다. 이처럼 활동여하에 따라 특정종교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위상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복지시설에 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특정 종교의 비중이 클 경우 당연히 그 종교가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그 종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조계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탑골자원봉사센터' 소속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모습.

수다. 실질적인 활동가는 30만명 정도인 것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은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설(비인가 포함)은 대략 2000여 개 정도. 이 가운데 불교계 시설 550여개를 제외한 1300~1400여 곳이 개신교와 가톨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불교보다 3배 이상 시설수가 많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자원봉사자 수는 불교와 단순비교해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자원봉사센터를 개신교와 가톨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지활동의 영역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불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현상대로라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의 불교 활동이 위축되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

는 내다보고 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지가 전국 15곳의 불교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으나, 법안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사회변화와 법제도 변화에 둔감하다는 반증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원봉사도 필요하지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



불교청소년교역연합회(위)와 신행단체 불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 사찰별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사찰과 지역 사암련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 팀을 늘리고 △사찰별로 자원봉사활동 담당자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불행히도 21의 송인주 전략사업기획 국장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면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1500곳 이상 들어오게 되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구미금융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진오 스톨은 "자원봉사자 수를 늘

리는 것도 관건이지만 모범적인 모델과 사례를 정해 벤치마킹을 해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단위사찰 단독으로는 쉽지 않다. 조계종의 경우 복지재단이 교육과 시설위탁을 지원하고 사찰과 연계해 활동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물론 자치단체의 사암련 차원에서 종단을 가리지 않고 범불교적인 연계활동을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명우·노병철 기자

## 정부, 예산 적극 지원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 해결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종교활동 중심지될 가능성 커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게 되고, 결국 특정 종교의 포교(선교활동)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 불교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계종 복지재단에 따르면, 불교 복지시설은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시설 100여개를 포함해 모두 550여 개(비인가 포함)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들 시설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불자 자원봉사자 수는 대략 100만명 정도로 추측된다. 물론 이 수치는 한 번 이상 활동을 한 봉사자의

계산이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갖는 의미다. 각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불교의 3배 이상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미칠 영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면 불교보다는 시설 수나 자원봉사자 수가 월등히 많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지역의

## 개신교·가톨릭 복지 인프라 규모, 불교계의 3배 넘어 사찰별 자원봉사팀 구성·정보공유 네트워크 마련해야

려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불교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불교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불교복지협의회를 축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부산에서 복지를 말하려면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부산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도시로 자리잡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여기에 있다. 부산에서의 불교위상이 결국 그 지역의 불교위상과도 직결되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관계자들


해서는 사회적 흐름과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 몇몇 뜻있는 복지계 인사들은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단위사찰-지역연합체-종단'으로 이어지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늘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수요건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모범적인 모델과 사례를 정해 벤치마킹을 해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단위사찰 단독으로는 쉽지 않다. 조계종의 경우 복지재단이 교육과 시설위탁을 지원하고 사찰과 연계해 활동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물론 자치단체의 사암련 차원에서 종단을 가리지 않고 범불교적인 연계활동을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명우·노병철 기자



www.njutcm.edu.cn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1월 13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국총장 손혜인